“나주 SRF 관련 환경부·난방공사·광주시 위법 행정”

혁신도시 시민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건설 과정서 환경영향평가·주민 수용 부족”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환경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광주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나주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환경부·한국지역난방공사·광주시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 파장이 일 전망이다.

빛가람 혁신도시 SRF 공익감사 청구 주민모임(이하 주민모임)은 18일 “나주 SRF발전소 건설과 광주지역 쓰레기 나주 반입과 관련, 위법·부당 행정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환경부·한국지역난방공사·광주시 등 3곳을 공익감사해줄 것을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주민모임은 공익감사 청구에 앞서 지난해 12월 7일부터 10일간 혁신도시 주민과 공공기관 직원 1천86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주민모임은 공익감사 청구서를 통해 “환경부가 난방공사의 나주 SRF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개최 적절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모임은 “난방공사가 나주 SRF발전소 건설 당시인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이후 초안과 다른 내용으로 2014년 4월 본안평가서를 제출했음에도 환경부가 차이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쓰레기 연료의 양과 연료의 반입 지역(전남 444t→전남 225t, 광주 444t)을 임의 변경했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게 주민모임의 입장이다.

주민모임은 “난방공사가 2012년 6월30일까지 전남권 6개 시·군의 ‘성형 SRF’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했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6개 시·군과 사전 협의 없이 광주시에서 제조한 ‘비성형 SRF’를 반입할 목적으로 SRF 소각장을 설치, 전남권 성형 SRF를 납품할 수 없게 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주민모임은 “광주시의 경우 나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의·협약 없이 광주지역 쓰레기 전량을 나주에서 소각하기 위해 ‘광주시 가연성쓰레기 연료화 사업’을 강행했다”며 “수요처가 정해지지 않은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평가 결과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주민모임은 “평가 당시 나주시의 광주 SRF 반입 반대 의사를 광주시가 평가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부당 행정 행위이자 배임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정확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SRF 공익감사 청구 주민모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 SRF저지 나주시민 비상대책위원회, 빛가람아파트연합회, 빛가람학부모모임, 빛가람 동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했다.

주민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감사원에서 이번 안건이 채택돼 추가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공익감사 청구 이후에도 난방공사와 나주시 갈등이 계속될 경우 혁신도시 개별난방 전환 준비운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공익감사는 나주 SRF가 들어설 당시 주민 수용성 확보가 미흡했던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산자부를 통해 광주시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돼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후성 기자

전남도, 건설근로자 근무이력 관리 ‘전자카드제’ 의무화

전남도는 18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및 퇴직공제금 누락 방지를 위해 근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시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근무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근로일수, 퇴직공제 내역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올해부터 발주된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300억원 이상 민간공사다. 오는 2024년까지 공공공사의 경우 1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50억원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광주형일자리’ 車부품 조달 지역기업 상생 협력 나선다

GGM 차량 생산 대비 1차 협력사와 2·3차 업체간 협력 강화

광주시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할 경형SUV 차량의 지역 내 부품 조달 안정화를 위해 지역기업 상생 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8일 “이번 사업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완성차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 자동차 부품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주관기관은 ㈜광주그린카진흥원이며 참여기관은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이다”고 밝혔다.

경형SUV 부품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3차에 걸쳐 총 60억원을 투입해 자동차부품 모듈 사업화 지원과 기업 맞춤형 통합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모듈 사업화 지원은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업체간 상생 협력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차체·샤시 분야 3건, 의장 분야 1건, 시트분야 1건 등 총 5개 과제 10개 기업을 지난 8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과제당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부품기업 맞춤형 통합지원은 ▲저마진 고난도 부품 제조 공정 개선 ▲융합 전장 제품 시장확대 인증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융합 아이템 발굴 ▲자동차 부품기업 체질개선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 다각화 마케팅 지원 등 총 5개 분야로 나눠 추진되며, 20일부터 지원기업을 모집해 오는 2월 업체를 선정·지원한다.

이번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다른 지역 기업으로부터 오는 부품을 지역내 2·3차 협력사가 1차 협력사와 공동으로 지역 내에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게 돼 기업기술력 향상과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 내용은 20일부터 (재)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부품기업들의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탄 기자

주민 주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본격화

道, 공동체 분위기 회복·청정자원 보전 중점…자긍심 증진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마을공동체 분위기 회복 및 청정자원을 관리·보전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민선 7기 핵심시책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지속 발전을 위해 바다·강·태양·갯벌 등 전남의 청정 자원 관리·보전과 함께 이웃간 정이 넘치는 마을공동체 정신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블루투어(Blue Tour)를 완성하기 위해 쾌적한 주변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업 계획부터 추진, 사후 관리까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정신을 높여 생활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270억원(도비 108억원, 시·군비 162억원)이 투입되며 도내 3천개 마을을 대상으로 인식 전환, 환경 정화, 경관 개선 등 3대 분야로 구분돼 추진된다.

인식 전환 사업은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가꾼다’는 주민 인식을 유도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전남도는 시·군 사업 결과를 종합평가해 포상하고 우수마을을 홍보한다.

환경 정화 사업은 장기 방치된 생활·영농·해양 쓰레기를 사회적경제기업이나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집중 수거하고 폐기물을 분류·보관·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 깨끗한 전남을 만들게 된다.

경관 개선 사업은 소규모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점의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해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되살리고 주민 화합과 마을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며 “전남의 청정자원은 전남의 보물로 사업 성공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